

“주총 정족수를 채워라” 코스닥社, 감사선임 난항

올해도 새도보팅 폐지 ‘후유증’

올해도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새도보팅’ 폐지로 코스닥 상장사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새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7년 말로 폐지됐다. 새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지난해 주총 시즌에는 56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바 있다. 56개사 가운데 51곳이 코스닥 상장사였다.

코스닥협회는 “지난해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이하 ‘감사’) 선임안건을 처리하려던 코스닥 기업 335개사 중 51개사가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올해는 약 450개 회사가 감사 선임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분 구조상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상법상 주총에서 기본적인 안건을 결의하려면 출석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만일 최대주주의 지분이 25%를 넘는다면 재무제표 승인 등 기본 안건 결의에는 무리가 없다.

문제는 이른바 ‘3% 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 안건이다. 감사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 주주들의 지분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3대



2017년 말 새도보팅 폐지 이후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자투표에 대한 상장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왼쪽)이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방송인 오상진씨와 포즈를 취했다. /예탁결제원

기관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인데 새도보팅 폐지 이후 감사 선임이 어려워졌다”며 “감사를 선임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기존 감사가 연임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감사직을 기약 없이 봐야 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올해는 전자증권 제도 시행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들이 늘어 부결 안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 결의 안건이다.

지난달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928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154개사(8.2%)는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감사 선임 외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보통결의 안건의 경우 408개사(21.2%)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해 부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관 변경과 사업재편(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등 특별 결의 안건은 684개사(35.5%)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부족으로 부결될 수 있다고 상장사협의회는 우려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점점 더 많은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투표제를 채택해도 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자투표제의 접근성도 높고 소액주주가 많은 상장사는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가계 대출수요 급감 은행채 발행 줄인다

시장, 은행채 순상환 추세에 주목

(주요 은행채 만기) (단위: 억 원)

구분	1월	2월	3월
전체	105,100	108,001	86,700
특수은행채소계	75,900	69,901	60,600
산업기업	51,000	39,600	28,900
수출입	6,200	11,600	3,800
농협	1,800	2,500	7,900
수협	1,700	0	1,900
시중은행채소계	24,600	36,800	23,700
신한	6,100	14,000	10,500
국민	3,000	8,000	5,000
하나	7,500	7,000	7,700
우리	8,000	7,800	500
지방은행채 소계	4,300	1,300	1,000
외국은행채 소계	300	0	1,400

(자료=한국투자증권)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난 1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가계부채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량수준과 증가속도가 높은 것이 분명하다. 특히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가까이 갔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1월 금융통화위원회)

“꼭 막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돈 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자로 먹고 사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걱정이요. 외부에서 추가로 자금을 더 발행할 유인이 많지 않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 A씨의 고민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서다.

기업대출 시장도 사정은 좋지 않다. 산업은행이 국내 3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4.4% 줄고, 내년에는 6.3%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이유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부서는 기피부서가 됐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가계 여신이 줄자, 영업성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다.

대출 수요가 줄면서 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어낼 이유도 줄어들고 있다.

17일 은행권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2월 은행채 만기 규모는 10조 8001억원이다. 이중 산금채 만기가 3조 9600원으로 가장 많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은행채 만기가 각각 1조4000억원, 7800억원으로 많다.

3월 만기도 8조6700억원에 달한다. 산금채가 2조8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시중은행채 만기는 2조3700억원 규모다.

시장에서는 은행채의 순상환 추세가 이어질지 주목한다. 지난 1월 은행채 발행 규모는 9조원 이상이다. 중금채가 2조원 이상 순발행됐다. 하지만 시중은행채는 대부분 순상환되면서 발행시장이 위축됐다.

한국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대출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금리하락에 따른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자산운용사와 은행중심의 은행채 투자수요가 꾸준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가계 대출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에 이른다. 조사대상 28개국 가운데 호주 캐나다에 이어 3위다. 지난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약 15%)은 중국(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김민호 기자 kmh@

쉬운 대출 택할수록 신용회복 어렵다

대부업·사금융 이용 후 감당 어려워져 법정한도 초과이자 징수 피해도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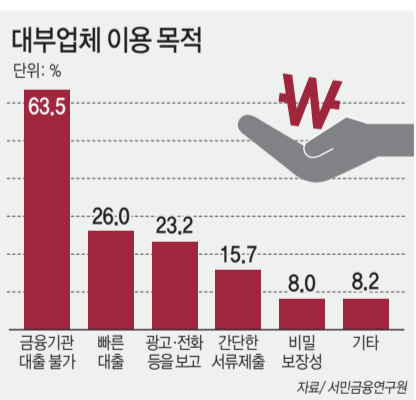
‘쉽고 빠른 대출’로 알려진 대부업체나 사금융업자를 이용할수록 차주의 신용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통해 중복 대출을 받는 대다수 차주의 경우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렵고,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또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7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말 대부이용자는 247만 3000명으로,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667만원 수준이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목적은 ‘빨리 대출해 주기 때문에’와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부광고 및 전화, 문자 등을 보고’, ‘서류가 간단해서’ 등의 응답비율이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해 빌린 돈은 주로 주거관리비 등 기초 생활비(64%)로 사용됐으나, 신용카드대금 등 다른 부채를 돌려막는데에 사용한다는 응답도 44%를 기록했다.

차주의 대부 신청이 거절된 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30~50대의 11.1~12.8%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고 답한 가운데 60대 이상에서도 15.7%의 차주가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18.2%)·무직(14.7%)·아르바이트(12.7%) 순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금융업자만 이용 중인 차주의 경우 보통 중복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신용회복이 어려워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 2곳(1.95개 업체)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2곳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률 또한 47.4%로 높게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 차주들이 겪는 가장 심각

한 피해로는 ‘법정한도 초과이자 징수’가 40.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전체의 16.8%가 원금 이상의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금융업자의 약 60% 정도가 법정 이자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금융을 이용한 차주의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응답비율이 0.8%에 그쳤다. 사금융의 특성상 신청 여건이 어렵고, 법원에서 사금융은 진정성을 의심해 인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차주의 경우 44.7%가 개인 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금융 이용 차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에서 서민금융의 역할과 미래’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준의 신용회복제도가 있으나, 여전히 차주의 채무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도입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KB證 “환전 수수료 없이 해외주식거래”

‘글로벌 원 마켓’ 통합증거금 서비스

글로벌 증시 상승세로 투자자의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마존, 텐센트 등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주식 직구’는 새로운 추세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환전 서비스 등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KB증권은 연초에 출시한 ‘Global One Market (글로벌 원 마켓)’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미국, 중국A, 홍콩, 일본 등 글로벌 5대 시장 주식을 환전 수수료 없이 원화로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특히 원(KRW), 달러(USD), 위안화(CNY), 엔화(JPY) 등 다양한 통화로 거래해야 하는 타사 통합증거금서비스와 달리 원화로만 거래해 고객 입장에서는 단일 통화시장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을 매도하고 중국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달러에서 원화로, 원화에서 위안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회당 0.5%~1%)가 두 번 발생한다. 반면 KB증권의 ‘글로벌 원 마켓’을 통하면 환전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시점의 매매기준율(매수



·매도의 중간값)을 사용해 원화증거금을 징수하고 반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는 KB증권 자체의 FX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유 주식 매도 시 자동 환전된 원화예수금이 입금되어 자유롭게 시장교차 거래가 가능하고, 고객이 주문한 시점의 실시간 기준환율을 적용해 간밤에 생길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한국보다 결제일이 하루 빠른 중국주식을 당일 매수하는 경우 결제일 차이로 발생하는 결제대금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글로벌원마켓’은 KB증권 휴트레이딩시스템(HTS) ‘H-able(헤이블)’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able(마블)’, 전국 영업점, 고객센터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손영지 기자